

Alain Supiot 교수의 「사회정의의 현대적 의미 및 ILO의 미래」에 대한 토론문

세계화, 신자유주의화와 사회정의

신광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알랭 쉬피오 교수의 발표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2차 대전 이후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로 인정된 사회정의를 쇠퇴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회정의의 개념을 통해서 오늘날 노동문제와 경제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의 진전을 위해서 몇 가지 고려사항을 다루고자 한다.

먼저, 사회정의의 개념 자체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회정의의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 정치, 사회와 문화, 환경과 생태 영역에서의 사회정의 개념이 필요하다. 다차원적인 사회정의 개념 구분이 필요한 것은 생태 차원의 사회정의를 노동 차원의 사회정의와 다르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중반 이후 불황을 겪고 있었던 영국과 미국에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경제적으로 시장자유주의 이념을 내세우는 경제 원리였다. 정치적으로는 법과 질서를 내세우면서 권위주의를 부활시켰고, 기업의 이익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약하였으며, 전후에 자리 잡은 복지제도를 약화시키는 등 사회적인 차원에서 보수주의를 부활시켰다.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 케인스주의에 대한 거부, 시장 근본주의에 대한 믿음 등을

* 이 글은 한국노동연구원이 2019년 5월 30일 주최한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사회정의를 향한 국제사회의 꿈: ILO 백년의 도전과 동아시아의 경험'에서 발표된 알랭 쉬피오 교수의 기조강연에 대한 필자의 토론문과 토론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내세웠다. 신자유주의자들의 편협한 사회정의는 자유로운 시장과 경쟁이 정의라는 믿음에 근거하였다. 시장 중심의 사회정의 개념이 모든 정의의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사회적인 것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전후 제정된 ILO 헌장에서 제시된 사회정의 개념은 자유주의 경제의 위기에 따른 경제위기와 유럽 국가들 사이의 잔혹한 살상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제국주의 전쟁과 경쟁이 가장 중했던 열전체제(the Hot War)는 두 차례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대규모 사상자를 내면서 1945년 막을 내렸다. 19세기 유럽 국가들 간 전쟁이 208회나 있었고, 20세기 두 차례의 대규모 세계대전 이전에도 이미 크림전쟁(the Crimean War)과 같은 대규모 전쟁이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일어났다.

ILO 100주년인 2019년은 ILO 탄생 시기인 1차 세계대전 직후와는 매우 다른 환경을 보이고 있다. 군사적인 충돌 없이 지구적인 수준에서 시장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세계화, 신자유주의화와 금융화가 빠르게 이루어졌다. 그 결과 신자유주의 옹호자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불평등과 빈곤이 더욱 더 심해졌다. 신자유주의가 앞세운 ‘시장’이라는 ‘신’은 대다수 지구인들을 빈곤으로부터 구제하지 못했고 풍요를 가져다주지도 못했다. 불평등이 심해지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모든 사회에서 문제가 되기에 이르렀다. 낙수효과가 사라진 시장경제에서 한편에서는 부의 집중이 이루어지고, 다른 한편에서는 빈곤의 집중이 이루어져서 양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자본, 상품과 노동력 이동이 글로벌한 수준에서 이루어졌지만, 법적, 제도적 장벽과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글로벌 수준에서 노동력 이동이 상품의 이동만큼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역 간 불균등 발전이 지속되면서, 선진국에서는 자본이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저개발국으로 이동하는 탈산업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빈곤 국가의 노동력이 이주 노동자의 형태로 임금이 높은 국가로 이동하는 노동력의 국제이주가 활성화되었다. 선발 산업국에서 산업 공동화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고 대신에 비정규직 고용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한 사회 내에서도 정규직 내국인 노동자와, 비정규직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라는 세 가지 유형의 노동자들이 등장하였다.

또한 세계화로 인하여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동시에 기업 활동을 하는 초국적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전체 경제에 미치는 개별 국가의 영향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초국적 기업의 경제활

동 규모가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졌다. 수직적 분업을 통해서 지구적으로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글로벌 대기업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알랭 쉬피오 교수는 21세기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차원의 연대 형성, 경제민주주의, 사회생태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주장은 노동문제만이 아니라 인류 생존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방안이다. 그러나 다차원의 연대 형성은 세계화와 사회의 분화로 인하여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전 지구적 차원의 연대를 구축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개별 국가들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하면서, 일국 내 경제민주주의도 큰 진전을 이루어지 못했다. 사회생태적 고려도 경제대국들이 앞다퉈 무시하고 있다. 미국의 기후 협약 파기나 중국의 산업화가 그 예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모든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정의 개념을 ILO가 제시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지켜져야 할 노동인권과 시민권을 강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신자유주의에 의해 훼손된 노동권 및 시민권의 보장과 기술경쟁 및 시장경쟁을 통해 경제적으로 배제된 주변적인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 등과 더불어, 이주 노동자들과 내국인 노동자들 간의 경쟁 대신에 연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도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유럽통합의 경험은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유럽이 시장통합에는 성공했지만, 사회통합에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예로 스웨덴의 Laval case를 들 수 있다. 독자적으로 발전된 노사관계를 유지해 온 스웨덴이지만,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유럽연합의 시장통합을 강조하는 유럽연합 법원이 스웨덴의 노사관계를 부정하면서, 새로운 갈등이 나타났다. 그리고 임금과 고용조건이 노사교섭을 통해서 결정되었던 방식에서 벗어난 저임금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이 스웨덴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동유럽 기업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서, 스웨덴 노사관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이민 반대와 반외국인 정서로 이어지면서 스웨덴에서도 극우가 급부상하였다. 이는 EU가 공유된 사회모델(social Europe) 없이 시장통합만을 추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ILO가 글로벌 수준의 노동모델(global labor model)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유럽 내에서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노동자 연대를 글로벌한 수준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문제이다. 그렇다면 노동권 보장의 최저 기준을 제시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국가나 기업에 대해서 글로벌한 수준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약을 모색하는 것이 더 현실적

인 것으로 보인다. 최대주의적인 접근 대신에 최소주의적인 접근을 통해서 Global South와 Global North에 동시에 적용할 수 있고, 두 지역 노동자들의 연대를 촉진시키는 최소주의에 기초한 협약이 필요하다.

노동 영역을 포함한 사회모델의 제시와 실행을 둘러싼 협약이 새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무역을 규율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마찬가지로 포괄적이고 또한 구속력 있는 ILO 협약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ILO 협약의 준수와 이행 여부의 조사와 제재를 포함한 실행 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는 ILO의 위상 강화와 더불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유의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각 이코노미는 주로 생산영역의 변화를 의미하며, 변화의 결과에 따라 과국적인 상황과 포에이시스적 노동이 모두 가능하다는 점을 알랭 쉬피오 교수가 논의하고 있다. 지금까지 노동은 노동권과 공동결정과 같은 기업수준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렇지만 자동화와 인공지능의 대두와 같은 과학기술혁명은 전체 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를 요구하고 있다. 양극화인가 아니면 과학기술의 발전을 모두가 공유하는 새로운 산업자본주의 체제인가? 그 핵심에는 소유제도의 변화가 놓여 있다. 국민 모두가 로봇을 소유하고, 인공지능을 소유할 수 있는 자산-소유 민주주의(property owning democracy)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재분배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소득(basic income)이 아니라 생산수단의 기본소유(basic ownership)가 다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논의가 일국 수준이 아니라 글로벌 수준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알랭 쉬피오 교수의 주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ILO가 과학기술 혁신에 따른 부의 독점과 불평등 문제의 해법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기본 소유의 제도화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스토피아를 막고 모두가 과학기술발전의 혜택을 누리며 생태적으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할 것이다. **KLI**